

법령Ⅱ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

비상대비자원 관리법(시행령 포함)

- 문 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시·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생산·수리·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는 권한
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
 - ③ 「통합방위법」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
 - ④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지정 권한

- 문 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원행정처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- ㄴ.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에 관한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ㄷ.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려면 주무부장관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.
- ㄹ. 행정안전부장관이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장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ㄷ, ㄹ

문 5. A회사는 석유를 수입·가공·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, 그 대표이사는 甲이다. A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었다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회사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·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A회사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유하기 위하여 A회사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, A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甲에게 석유의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甲에게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.

문 6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훈련의 출석 또는 훈련대상물자의 제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국외여행 중인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자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등은 소속 공무원을 인도·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·인수하게 하여야 하고, 사용기관은 인도·인수 장소에 인도·인수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·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문 7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.
 -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.
- 문 8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무총리가 발령한 훈련실시명령에 따른 훈련 중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.
 - ② 중점관리대상 자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인력·물자 및 업체도 정부가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훈련 실시의 대상이 된다.
 - ③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 중에서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훈련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.
 - ④ 시·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발령한 훈련실시명령에 따른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문 9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훈련의 기간과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에 따른 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② 훈련의 기간은 연(年) 7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, 도상훈련과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.
 - ④ 훈련대상자·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교부하려는 경우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,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문 10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정부연습은 주무부장관이 연습의 방법·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.
- ②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·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,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연습의 방법·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정기로 지역별 자체연습을 실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실시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.

문 11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- ①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사실 및 임무를 적어 송달하는 고지서를 그 물자의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
- ② 사용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- ③ 국무총리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
- ④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력자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하였는데, 그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
문 1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동시관리훈련은 인력훈련 부문과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국무총리가 실시명령을 발령한다.
- ②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 그 설비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는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지만,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한꺼번에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는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 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④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.

- 문 13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하는 보상 또는 의료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지만,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곤란한 경우 의료지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- 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에 규정한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.
 - ③ 사망자 유족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- 문 14. 민방위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.
 - ②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·면·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시·도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 - ④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·면·동민방위협의회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문 15. 민방위기본법령상 직장 민방위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소속원의 거주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예비군의 대원일 경우라도 해당 직장의 장은 그를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, 그는 「예비군법」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가 면제된다.
- ③ 교육청에 소속된 공공영조물에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한다.
- ④ 민방위기술지원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원으로 중복하여 편성될 수 없다.

문 16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·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·도계획을 작성하여 시·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
문 19. 甲은 통·리 민방위대의 대원이다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甲이 동원 명령을 받았으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치료하여야 하는 경우 동원을 면제할 수 있다.
- ②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해 민방위대를 동원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甲이 소속된 민방위대에 동원을 명할 수 있다.
- ③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이 甲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기 위하여 방송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
- ④ 甲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장애 보상금을 받은 후 1년 이상이 지난 이후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원래의 사망 보상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.

문 20.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A도의 도지사는 민방위사태의 발생으로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甲에 대해서는 B시에 소재한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甲 소유 시설의 이전명령을, 乙에 대해서는 등화의 금지명령을 하는 한편, 丙 소유의 장비를 일시사용하는 조치를 하였다.

- ① 甲이 이전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A도의 도지사는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.
- ② 乙이 등화금지에 따라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丙 소유의 장비를 일시사용하려는 때에는 A도의 도지사는 미리 丙에게 알리고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.
- ④ 甲이 이전명령에 따라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면 B시의 시장과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문 21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치료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·숙박료·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ㄴ.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된 민방위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치료받은 경우, 그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ㄷ.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식비·숙박료·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ㄹ.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식비·숙박료·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ㄴ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ㄴ, ㄷ, ㄹ

문 22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지휘·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통·리 민방위대는 해당 읍·면·동장이 지휘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예비군의 대원인 경우에도 민방위기술�지원대의 대장이 될 수 있다.
- ③ 연합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.
- ④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민방위대의 지휘권을 행사한다.

문 25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민방위 경보는 경계경보와 공습경보로 구분한다.
- ② 중·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그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.
- ③ 댐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 두 개의 군에 걸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「하천법」에 따른 댐의 설치자는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경보를 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예비군법(시행령 포함)

문 26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중보건 의사로서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은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조직된다.
- ②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인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현역병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보충역에 편입되면 그 사람은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.
- ④ 지원하여 지역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지원 당시의 동·읍·면의 관할 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은 2년이다.

문 27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「통합방위법」에 따라 국방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중 예비군자원이 75명인 직장의 장은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45명이라면 그 직장예비군을 소대로 편성한다.
- ②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자치구의 특전예비군지역대로 편성할 수 있다.
- ③ 육군에서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는 육군참모총장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으로 편성한다.
- ④ 서울특별시에 있는 같은 계열 직장들의 직장예비군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편성할 수 없다.

문 28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한 경우 그 직장의 장은 퇴직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.
- ③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.
- ④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.

문 29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경찰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은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서 무장공비의 소멸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.
- ②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나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이 동원 보류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이들에 대한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.
- ③ 재해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원을 연기할 수 없다.
- ④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 발령지역에 있는 경우, 당해 예비군대원은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.

문 30.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(O)과 옳지 않은 것(X)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ㄱ. 무장공비가 마을에 침투하였을 경우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.
 ㄴ. 수임군부대의 장이 긴급조치로서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ㄷ. 수임군부대의 장이 긴급조치로서 주민의 재산을 제거한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ㄹ. 수탁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인하여 비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손실증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	ㄱ	ㄴ	ㄷ	ㄹ
①	O	O	O	O
②	O	O	O	X
③	X	X	O	X
④	X	X	X	X

문 31. 다음 중 예비군법령상 지역예비군부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하는 일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신고를 받는 일
 ㄴ. 무장을 위한 무기·탄약·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임무를 경찰서장으로부터 수탁하는 일
 ㄷ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른 자원조사에 참여하는 일
 ㄹ. 수임군부대의 장의 위탁을 받아 긴급조치를 하는 일

- ① ㄱ, ㄴ
 ② ㄱ, ㄷ
 ③ ㄷ, ㄹ
 ④ ㄱ, ㄴ, ㄷ

문 32. 예비군법령상 보상대상자의 구분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전상군경
- ②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공상군경
- ③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 사망한 예비군대원의 유족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재해사망군경의 유족
- ④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예비군대원의 유족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전몰군경의 유족

문 33. 예비군법령상 벌칙 규정이 정하는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

- ㄱ. 예비군훈련을 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 받은 사람
- ㄴ. 본인 대신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지연한 경우
- ㄷ. 동원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한 사람
- ㄹ.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

- ① ㄱ - ㄷ - ㄴ - ㄹ
- ② ㄱ - ㄹ - ㄷ - ㄴ
- ③ ㄹ - ㄱ - ㄴ - ㄷ
- ④ ㄹ - ㄷ - ㄱ - ㄴ

문 34. 예비군법령상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는?

- ① 중대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7개월 동안 80명을 넘지 못한 경우
- ② 국방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7개월 동안 임용하지 않은 경우
- ③ 「예비군법 시행령」에 따른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불합격 판정을 2회 받은 경우
- ④ 대대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1,500명이 되어 13개월 동안 지속된 경우

문 35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훈련과 훈련소집통지서의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30일의 한도에서 실시할 수 있고 연 1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부산광역시의회 의원과 부산광역시의 시장 및 부시장은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을 훈련하는 경우에 훈련하여야 한다.
-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훈련이나 점검을 하는 경우 외에는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-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통지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.

문 36. 예비군대원 甲은 동원되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치료로 인하여 일주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다.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甲과 그의 가족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된다.
- ② 甲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③ 장애보상금을 받은 甲이 그 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,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.
- ④ 甲의 경우 재해보상의 대상이 될 뿐 휴업보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.

문 37. 「예비군법 시행령」상 휴업보상금에 대한 규정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?

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·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(㉠)의 100분의 (㉡)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지급기간은 (㉢) 이내로 한다.

- | | ㉠ | ㉡ | ㉢ |
|---------|----|----|---|
| ① 가계지출액 | 80 | 1년 | |
| ② 최저생계비 | 90 | 1년 | |
| ③ 가계지출액 | 80 | 2년 | |
| ④ 최저생계비 | 90 | 2년 | |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3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될 수 있다.
- ㄴ. 한국철도공사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 상황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ㄷ.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ㄹ.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① $\neg$ ② $\exists$
③ $\neg, \sqcup$ ④ $\sqsubset, \exists$

문 39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·운영하는 유·무선통신망을 말한다.
- ②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항이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문 40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지역통제단장의 권한으로 행한 응급조치나 응급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역통제단장이 응급조치로서 현장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였다.
- ② 지역통제단장이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하였다.
- ③ 지역통제단장이 긴급구조의 권한 행사로서, 재난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위험구역을 설정하였다.
- ④ 지역통제단장이 긴급구조의 권한 행사로서, 재난이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재난현장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였다.

문 4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, 그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-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,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문 4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행정안전부장관은 시·군·구의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- ㄴ.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체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.
- ㄷ.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ㄹ.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.

문 43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,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나,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ㄴ.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매년 시행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ㄷ.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,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.
- ㄹ.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서현장지휘대, 방면현장지휘대,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,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.

문 44. 경기도 A시 소재 LPG저장탱크의 폭발로 전력·통신 시설 등 국가기반 체계가 마비되어, A시 자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역대책본부장인 A시의 시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A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국가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A시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A시가 행하는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A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재난으로 사망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「국가배상법」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- ④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A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계획의 수립·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, 재난관리기금·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.

문 45. 충청남도 B시는 지역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야간 불꽃축제를 개최하려고 한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B시의 시장은 야간 불꽃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최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B시의 시장이 작성하는 야간 불꽃축제 안전관리계획에는 지역축제의 개요,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,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다중밀집시설 붕괴 등 대형안전사고 대비 재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충청남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·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B시의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충청남도지사는 야간 불꽃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·점검할 수 있으며,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문 46. 경상북도 C시 전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매우 커서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C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정부합동 재난 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10명 내외의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되, 조사단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.
- ③ C시 지진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C시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한 경우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문 47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전문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ㄴ.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 3명 이상 및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비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을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한다.
- ㄷ.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
- ㄹ.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ㄷ, ㄹ

문 4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.
-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,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,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나,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문 49. 다음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질 수 있는 직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
 ㄴ.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
 ㄷ.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간사
 ㄹ.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

- ① $\neg, \perp$
② $\sqsubset, \sqsupset$
③ $\neg, \perp, \sqsubset$
④ $\neg, \perp, \sqsubset, \sqsupset$

문 50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매뉴얼 작성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② 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③ 공무원이 협의회의 위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④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